



유은혜·진선미 입각이 정부의 우경화 본색을 가리지 못한다

문재인 정부 첫 개각
개혁 청신호가 아니라
개혁 배신의 적신호

3면

9월 16일
'난민과 함께하는 행동의 날'
난민 차별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

8면

페미니스트 대통령?
여성 각료는 늘었지만
변하지 않는
여성 노동자의 처지

4면

여성운동
지도자들과
국가의 관계

5면

성차별적 채용에
손 놓고 있는
문재인

7면

영국 대학노조 간부이자
사회주의자 로라 마일스 방한 강연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대학 교육을 망가뜨렸는가

6~7면

간판만 바뀌
단 기무사

2면



대사동공안사 기자

기무사 문제는 문제인이 외면한 또 하나의 적폐

기무사 ‘해편’이 개혁? 보안경찰다운 위장술에 불과하다

김문성

9월 1일 국군기무사령부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이름을 바꿔서 출범했다. 인력도 축소하고 민간인 사찰, 정치 개입 등도 억제하겠다고 했다.

박근혜 정권 연장을 위한 촛불운동 무력 진압 모의를 기무사가 주도한 것이 폭로됐기 때문이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 쌍용차 해고 반대 파업장 침투 등 민간인 사찰 작태도 연이어 폭로됐다.

사실 군의 정치적 중립, 정치 개입 방지는 쿠데타로 집권한 과거 군사정권도 하던 말이었다. 물론 자기들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는 자기 흥내를 내는 군인들이 없어야 한다는 뜻으로 한 말이었지만 말이다. 그들도 장관, 국회의원, 공기업 사장 등의 자리에 앉을 때는 군복 벗고 민간인 신분으로 그랬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현역 기무부대가 민간인을 뒤지고 체포해 고문하는 일이 사라지진 않았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외관이 아니라 그 이면의 본질을 봐야 한다.

이번 개편은 문제인이 8월 초 직접 기무사 ‘해편’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해편은 국어사전에도 없는 단어인데, 청와대는 ‘해체에 가까운 개편’이라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달리 말하면, 본질의 존속인 것이다. 기무사의 계엄령 준비 문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나 기무사 해체를 주장해 온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은 8월 14일 합동으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기무사와 다를 것이 없다”며 이번 기무사 개혁을 “실패”라고 규정했다. 즉,

“법령이 부여하는 임무와 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의 명분으로 들먹이던 ‘군 관련 정보 수집’ 항목도 그대로 존재하고, 불법

행위의 근간이 된 대공수사권에 대한 조정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한마디로 간판만 바꿔 달았다는 것이다. 나름 보안 수사·첩보 기관다운 위장술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인력 축소의 경우를 보자. 축소본 대부분은 인력의 자연 감소분(산하 사병 전역시 보충 안 함)이라서 언제든 다시 늘릴 수 있다. 일부 고위직은 계엄 논의나 세월호 등 민간인 사찰 등에 연루돼 어차피 옷을 벗어야 한다.

민간인 사찰과 연결되는 대공수사권 등을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는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국방부는 민간인 수사권 중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나 집시법 위반 부분은 ‘군사법원법’을 개정해서 폐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조차 턱없이 미흡하고 기만적이다. 기무사(전신인 특무대, 보안사를 포함해)는 원래 민간인을 감시하고 수사하면 안 되는 것이다. 1990년 10월 보안사령부에 근무하던 윤석양 씨(당시 이등병)가 민간인 사찰 실태와 명단 일부를 폭로했을 때도 민간인 사찰은 불법이었다. 당시 일부만 공개된 사찰 명단에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등 이후 대통령이 되는 정치인들도 포함돼 있었고, 주로 야당·재야 인사들이었다.

그 명단이 1989년에 만든 청명계획이라는 계엄 대비(모의) 계획의 일부(예비 검속)였다는 건 나중에 밝혀졌다. 이번에 드러난 촛불 계엄 문건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를 막도록 야당의원들을 미리 체포하려고 한 것과 같다. 1989년 당시에도 군부는 민주화 흐름을 반동적으로 뒤엎을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 투쟁의 고조기가 1987년 그해 몇달로 끝나지 않고 수년간 이어지면서 민주화가 대체로 자리잡았다.

이 흐름 속에서 폭로됐기 때문에 노태우 정부는 국방장관 사퇴, 이듬해 보안사 명칭 변경(기무사) 등으로 양보를 해야 했다. 보안사의 사찰 명단에 있던 김영삼은 집권하고 나서 안전기획부(옛 국정원)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 개정도 했다.

그러나 김영삼 본인이 경제 공황을 앞두고 안기부 수사권을 되돌리는 날치기를 했다. 기무사의 수사 관행도 바뀌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JTBC의 탐사보도 프로그램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 26년 경력의 기무사 수사관이 제보자로 나왔다. 그는 윤석양 씨의 폭로 당시 상부 지침이 ‘민간인 수사를 하지 마라’가 아니고 ‘군(인)과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하라’는 것이었다고 증언했다.

불량 어음

이런 과거가 있는데도, 안보지원사를 먼저 출범시켜 놓고 수사권 축소는 향후 국회에서 한다는 것이니 어음으로 치면 불량 어음이나 다름없는 듯하다. 문제인이 국회로 미루고 외면해 버린 적폐 청산 과제가 한둘도 아니니 더욱 그렇다.

한때 전두환 군사정권 출범의 사령탑 구실을 했고, 안기부, 경찰 보안수사대 등과 찰뿔 공조로(뒤로는 치열한 실적 경쟁을 하면서 말이다) ‘빨갱이’ 사냥을 하던 군사기관의 억압적 성격을 위축시키는 것은 전혀 아니다.

오히려 세월호 구조를 방기하고 실패한 책임에 대해 집중 조사받아야 할 해경을 박근혜가 해체해 버린 일이 떠오른다. 형식상 기구가 해체됐으니 적어도 해경 대상 수사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박정희 군부 독재가 만든 중앙정보부가 그동안 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꿔 왔지만, 지난 정부 동안 본질은 바뀐 게 없다는 게 드러났다. ‘안기부 X파일’, 간첩 조작, 쌍용차

개입, 세월호 개입, 대선 댓글 공작 등은 모두 선출된 민간 정권 아래서 벌어진 일들이다.

예상대로 박근혜와 군부는 퇴진 촛불 운동 초기부터 무력 진압을 고민했다. 가장 최근에는 기무사령관이 촛불 시위 초기부터 탄핵 당일까지도 박근혜 청와대를 들락거리며 소통한 일이 드러났다.

1987년 이후 최대 규모의 정권 퇴진 운동에 맞서 자기 선배들처럼 친위 쿠데타 모의를 주도했던 것이다. (1987년의 선배들처럼 힘에 밀려 거사를 포기해야 했다.)

이런 역사와 현실은 이 핵심 억압 기구들의 임무가 기존 국가를 아래로부터의 저항과 변화(개혁), 혁명적 도전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임을 보여 준다. 필요할 때 반동적 거사를 일격에 성공하려면 이들의 일상도 그것을 위한 준비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 그들이 지키려는 체제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러니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자리잡은 일상적 시기에도 유사시를 대비한 준비와 훈련으로서 민간인 사찰과 수사 등의 임무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기구들 때문이라도 개혁가들이 몇몇 요직에 진출해 국가의 성격을 노동자·서민을 위한 개혁을 위해 바꿀 수가 없다. 아래로부터의 투쟁만이 국가를 움직이게 할 수 있고, 그조차도 어느 수위가 되면 이런 억압 기구들이 반동적으로 작동하게 마련이다(촛불과 친위 쿠데타 음모처럼). 자본주의적 국가의 민주화라는 신기루를 쫓기보다는 운동 속에서 혁명의 현실성을 바탕으로 주장하고 실천하는 정치조직이 필요하다.

※ 전문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대사동공안사 기자

‘해체에 가까운 개편’은 본질은 존속시킨다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Q 용어설명

안기부 X파일

안기부가 삼성 이학수와 중앙일보 회장 홍석현의 대화를 도청한 것이 2005년에 유출돼 삼성·정치권·검찰의 부패 연결고리가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 첫 개각

개혁의 청신호가 아니라 개혁 배신의 적신호

김지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첫 개각을 단행했다. 이번 개각으로 장관 5명(여성가족부, 사회부총리·교육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이 교체됐다.

최근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는 문재인은 친기업적 우경화를 확실히 추진하려는 듯하다. 시장 지향적 경제 정책을 강조해 온 경제부총리 김동연은 자리를 지킨 반면에, 진보 교육감 출신인 김상곤과 여성단체 기반이 있는 정현백 장관은 교체됐다. 노동부 최초로 노조 간부 출신이자 여성 장관으로 주목받은 김영주 장관도 경질됐다. 이들(특히 김상곤, 정현백)은 문재인 정부에게 개혁 이미지를 제공해 진보 염원층의 기대를 임기 초에 모으는 구실을 톡톡히 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은 이들을 토사구팽(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아박하게 버리는 것을 의미)한 것이다. 물론 이들은 청와대 코드에만 맞았고 개혁을 바란 대중의 기대에는 전혀 부응하지 못했다. 이들이 팽 당한 것을 두고 개혁 후퇴라고 반발하는 분위기가 없는 것도 그래서다.

한편, 문재인은 노동과 기업 성장 문제를 다루는 노동부와 산업부 장관 후보자에 보수적인 정통 관료 출신을 지명했다.

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재갑은 이명박·박근혜 우파 정부 하에서 고용노동부 차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 탄탄대로를 걸었다. 언론들은 이재갑을 “고용 전문가”라며 추켜세운다. 그러나 이 “고용 전문가”가 노동부 차관을 하던 시절 노동부는 한국GM 부평공장의 사내하도급이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했다. 한국GM 사측은 이 해석을 근거로 창원공장 비정규직 직접고용 명령을 거부했다.

민주당이 우파 야당들과 합의해 정의당 이정미 의원을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배제할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노동 개악을 하려고 저러나’ 하고 우려했다. 민주노총도 이번 인사가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재갑은 노무현 정부의 사람입국 일자리위원회 기획운영차장일 때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 경직성”을 일자리 부족의 원인으로 꼽았다.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직 개악법을 옹호하고, 성과급 임금 체계 확산 등을 주장했다. 이재갑은 ‘텐마크 모델’을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유는 ‘고용의 유연안정성’ 때문이었다. 이는 경제부총리 김동연이 최근 내놓은 ‘혁신형 고용안정 모델’과 유사하다.

한편, <중앙일보>는 쌍수를 들어 산업부 장관 교체를 환영했다. “탈원전 미션의 신도이자 영국 원전 수출을 맡아 먹은 [전 산업부 장관] 백운규를 쫓아낸 건 잘했다. 빈사 상태에 빠진 산업계에 한 줄기 희망을 줬다. ... 인간 이성에 반하는 소리도 더 이상 하지 마시길.”

백운규가 결코 진보적 인물이 아니었는데도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을 보면, 기업주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에 더욱 ‘기



비밀요원 제공 사진

개혁 개각? 그럴듯한 포장, 알맹이는 우경화

업 프렌들리’ 질주를 촉구하는 것이다.

신임 산업부 장관 후보자 성윤모도 이재갑 신임 노동부 장관 후보처럼 주로 기업 정책을 다루는 관료답게 정권을 가리지 않고 승진해 왔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청와대 국정상황실을,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에서 관료 생활을 했다.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따서 미주협력과, 일본 경제산업성 파견근무를 했다.

국방부 장관 교체도 진보성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육군 출신이 아니라 사실은 개혁이나 진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국방 ‘개혁’이라며 내놓은 기무사 ‘해편’은 이 정부의 ‘개혁’이 평범한 사람들이 기대하는 개혁과 다름을 보여 준다(관련 기사 : ‘기무사 해편’이 개혁? 보안 경찰다운 위장술에 불과, 김문성). 기무사는 이름만 바뀐 뿐 민간인 사찰의 명분이었던 군 관련 정보 수집 항목은 그대로이고 조건을 달아 민간인 사찰도 유지하며 대공수사권도 그대로다.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라 국방 주도 성장이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부는 내년 국방예산을 늘렸다. 대표적 군비 증강 사업인 F-35 도입, 한국형 전투기 사업(KFX) 등이 바로 국방부 장관 후보자 정경두의 주 전공이다. 군비 증강 코드 인사가 아닌가 싶다. 정경두는 지난해 합참의장 후보자로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가서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한 한미연합훈련 축소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강경 발언을 한 바 있다.

연결 고리

교육부와 여성부 장관 후보 지명은 이번 개각의 우경적 본색을 가리려는 카드로 보인다. 지난 1년 동안 여성들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말뿐인 개혁에 반발하며 싸웠다. 이들과 가까워 보이는 인사들을 해당 부서의 장으로 지목한 것을 보면, 오히려 문재인이

여성차별 해소나 학교 비정규직 조건 개선에서 더 소극적이 될 수 있음을 짐작케 한다. 친밀한 듯한 얼굴들을 내세워 돈 들어가지 않는 개혁(말 잔치)을 하겠다는 계산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여성부 장관 후보로 진선미 의원을 발탁한 데는 새로운 여성운동과의 관계를 고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불법촬영 항의 시위, 낙태죄 폐지 시위 등 최근 폭발한 새로운 여성운동을 단속해 주길 바랄 것이다. 진선미 의원은 운동권 출신은 아니지만 호주제 폐지 운동 참여,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등을 지내며, 여성운동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특히 성범죄 계시물 등이 유통되던 웹사이트 소라넷의 서버 폐쇄 약속을 얻어 내면서 많은 페미니스트들의 지지를 얻었는데, 메갈리아 회원들은 그에게 정치후원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정현백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를 정면 비판한 불법촬영 항의 시위에 공감을 표현하고 주축측과 만났다가 문재인 지지자들로부터 큰 비난을 받았지만, 막상 이 시위 주도자들로부터는 (주류 여성 운동의 지도자 출신인 탓에) 그다지 신뢰를 얻지 못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새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 유은혜 의원은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반대했었고, 2016년에는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진짜 정규직화” 등을 약속하는 정책협약식도 맺었다. 그해 말 유 의원은 교육공무직법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 법안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염원을 반영한 것으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의 핵심 요구 중 하나였다.

그러나 당시 유 의원은 우파의 반발에 굴복해 발의 20일 만에 법안을 철회했다. 청문회를 앞두고도 유은혜 후보자는 ‘교육공무직법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철회했고 비정규직 문제는 해소되고 있어 그 법안을 발의할 필요는

없다’며 “걱정할 것 없다”고 답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반기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청문회 때 답하겠다고 기존 입장에서 물러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임명되기도 전에 노동자들의 기대를 배반하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의 대입제도 개편안이 교육 개혁 열망을 저버렸음에도 “대입제도는 이미 발표했다”며 재론 필요성을 부정했다.

이처럼 장관 후보자들이 진선미, 유은혜 의원은 문재인 ‘정책 방향’에 충실한 인물들이다. 둘 다 문재인 대선 캠프 대변인으로 활약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개각에 개혁 포장을 덧씌우고 싶어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가리키는 ‘개혁’이 천대받는

대중이 원하는 개혁과 다르다는 것이 이번 개각으로 다시 한 번 분명해졌다.

문재인 정부가 자유주의자들답게, 자본가들이 마음껏 이윤 추구 활동을 하도록 판을 깔아 주면서도 포퓰리스트들답게 노동운동과 천대받는 대중의 호감을 산 유은혜·진선미 같은 인사들을 내세우는 이유는 자명하다. 개혁의 청신호가 아니라 개혁 배신에 따른 대중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카드인 것이다. 환영할 인사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경계해야 할 인사들이다. 여당 및 정부와 독립적으로, 아래로부터 대거 투쟁할 때 개혁을 이룰 수 있다.

9월 4일 발표된 기사 ‘문재인 정부 첫 개각 — 우선회 속도 높이기 위한 도움닫기’를 최신 상황을 반영해 수정·보완했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노동자연대는 이윤을 위해 노동자 대중의 삶을 희생시키는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이윤은 다른 세 계를 추구하는 노동자 운동 단체입니다.

노동자연대는 다른 세상을 만들 힘은 노동자 계급과 파업의 대중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에 있다고 믿으며, 노동자 투쟁에 참여하고, 연대를 건설하고, 투쟁 승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노동자·학생·청년 등으로 구성돼 있고,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울산, 강원충북 등에 지회들이 있습니다. 전교조·공무원·금속·건설 등에 노동자 모임이 있으며, 더 많은 부문에서 노동자 모임을 만들려 합니다.

이름

이메일

소속 (☐ 직장 | ☐ 노조 | ☐ 대학교 | ☐ 종교동학교 | ☐ 기타)

[선택] 휴대전화번호

회비약정액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아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2만 원 | ☐ 3만 원 | ☐ 4만 원 | ☐ 5만 원 | ☐ 기타 () 원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www.workerssolidarity.org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909-2026 또는 mail@workerssolidarity.org로 보내 주세요.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02-2271-2395 / 팩스 02-2271-2396 / 이메일 mail@workerssolidarity.org

문재인의 말뿐인 페미니즘

정진희

문재인이 대선에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해서 많은 여성들이 변화를 기대했다. 하지만 갈수록 실망이 늘어났고 많은 여성들이 문재인에게 분노하고 있다.

지방선거 뒤 문재인이 급속하게 우경화하면서 지지율이 급락해 8월 말에는 53퍼센트까지 낮아졌다. 특히, 일자리 축소, 최저임금 개악 등 노동개악과 알량한 복지 대책 등이 노동계급과 서민의 불만을 샀다. 문재인 지지율 하락에는 말뿐인 성평등 정책에 대한 여성들의 불만도 작용했다.

문재인은 “성평등을 적극 실현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공언과 달리, 지금껏 상징적이거나 미미한 조치만 실행했다. 첫 내각 임명 때 외교부 장관·고용노동부 장관·보훈처장 등 주요 보직에 여성을 임명하며 ‘내각의 30퍼센트 여성 할당’ 공약 달성을 공표했지만, 노동계급 여성들을 위한 조치는 미미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약속은 생색내기에 그쳤고 성별 임금격차 해소책도 거의 내놓지 않았다. 성별 임금격차가 OECD 평균 14.1퍼센트의 2배가 넘는 37퍼센트를 기록하며 OECD 1위를 19년째 차지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성별 임금격차는 여성에게 맡겨진 과중한 양육 부담, 장시간 노동체제, 승진 차별 등 사회의 구조와 관행이 결합된 결과다. 하지만 문재인은 임금 수준을 공개하는 성별임금공시제처럼 실효성 없는 대책이나, 승진할당제처럼 소수 여성에게 혜택을 주는 대책만 제시했을 뿐이다.

반면 여성 노동자 대부분이 최저임금제의 영향을 받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을 약간 올려주다가 도로 빼앗는 개악을 자행했다. 또, 박근혜 정부의 적폐로 꼽혔던 시간제(저질) 일자리 양산 정책을 폐지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노동유연화 확대를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 운운하지만 노동시간 단축은 지연시키고 양육 지원은 여전히 생색내기 수준이다. 쉬운 해고, 의료보험·국민연금 개악 등도 추진하고 있다. 결국 노동계급 여성들이 직장에서 혹사당하면서도 집에서 양육·노인 부양 등도 소홀히 하지 말라고 주문하는 셈이다.

고용 악화, 커진 소득격차 등으로 문재인 지지율이 크게 하락하자 최근 문재인 정부는 복지 예산을 늘렸다. 하지만 이것은 자본주의 체제의 불안정 심화를 막는 게 목적이어서 짧길 인상 수준이다. 또한 의료 영리화 등처럼 복지 증대를 상쇄시키는 정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에 대한 여성들의 실망은 5월에 ‘불법촬영 편파수사’에 항의하는 대규모 운동으로 분출했다. 노동정책은 정부 초기부터 노동자들에게 기대와 불만을 동시에 샀다. 최저임금 개악 등으로 문재인 정부의 친자본주의적 본색이 분명히 드러나자 노동자들의 목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여성 집회를 기록한 불법촬영(몰카) 항의 운동

소리는 더욱 커졌다. 여기에는 여성 노동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여성 노동자들은 남성 노동자들과 함께 파업, 집회 등 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였다. 지방선거 직후 열린 민주노동당 비정규직 철폐 집회에는 무려 6만~7만 명이 모였는데, 대열의 절반 이상이 학교 비정규직 등 여성 노동자들이었다. 이들이 든 “사기 치지 마라”라는 손팻말은 문재인 정부의 본질을 선명하게 폭로했다.

노동정책과 성평등 정책을 분리해 별개 문제로 취급하는 경향이 운동 내에서 강하지만, 이 둘은 결코 별개 문제가 아니다. 여성의 다수가 노동계급에 속하므로 친자본주의적 노동정책은 여성 대부분의 조건을 후퇴시킨다. 의료, 국민연금 개악 등과 같은 복지 후퇴도 대다수 여성들의 생활조건을 악화시킨다. 문재인 정부의 ‘페미니즘’이 노동계급 여성에게는 생색내기 이상이 될 수 없는 이유다.

생색내기

문재인 정부는 모호한 언사를 사용하면서 지배계급과 자신을 지지하는 진보 염원 대중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 왔다. 낙태 문제에서 이런 줄타기가 두드러졌다. 2017년 10월 낙태죄 폐지와 임신중절약(미프진) 도입 청원에 23만 5천여 명이 참가했다.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은 개혁을 암시만 할 뿐 알맹이 없는 답변을 하며 헌법재판소로 공을 떠넘겼다.

올해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유지 의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낙태 처벌을 강화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을 기습 공표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 수술 거부를 선언하며 반발하자

하루 만에 현재 판결 때까지 시행을 유보했지만, 개정안을 철회하지는 않았다.(그래서 직선제 대한산부인과 의사회는 모자보건법 개정을 요구하며 낙태 수술 거부를 계속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0월 낙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조사 항목이 낙태죄 찬성 쪽으로 편향돼 있음이 며칠 전 폭로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낙태죄 존속을 원한다는 것은 올해 5월 낙태죄 헌법소원 공개변론을 앞두고 법무부가 현재에 낸 공개변론서에서도 얼핏 드러났다. 법무부는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여성을 “성교는 하되 그에 따른 결과인 임신 및 출산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비난하면서 낙태죄 폐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올해 2분기 출산율이 0.97로 떨어졌다고 큰 우려를 나타냈다.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도 ‘세계 최저인 0.9명 대 출산율 쇼크’를 대서특필했다. 여성을 아이 낳는 도구로 여기는 보수파들은 낙태죄 폐지가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더 낮출까 봐 우려한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폐지 판결을 올해 8월에 내릴 듯하다가 다음 재판부로 기약 없이 미뤄 버린 것도 이와 관련 있다. 9월 19일 현재 재판관 5명이 교체돼, 심리부터 다시 해야 하므로 현재의 낙태죄 판결이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다.

지난해 <한겨레>, <경향신문> 등 자유주의 친정부 언론들은 2012년 낙태죄 합헌 판결 이후 현재 구성이 더 자유주의적으로 바뀌었으므로 올해 낙태죄 위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며 사람들의 기대를 부추겼다.

<노동자 연대> 신문은 아래로부터의 압력이 크지 않는 한, 출산율이 매우 낮은 나라에서 낙태죄 위헌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배계급이 출산과 양육을 위한 조건 개선에 큰 관심이 없고 여전히 개별 가정의 여성들에게 떠넘겨 노동력을 값싸게 재생산하려 들기 때문이다. 지정학적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도 병역을 걱정하는 한국의 지배계급이 낙태죄 폐지를 꺼리는 이유다.

따라서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받으려면 문재인 정부와 현재에 조금치도 기대를 걸지 말고 독립적으로 대중 투쟁을 해야 한다. 향후 몇 년을 내다보며 대중 운동을 건설해 지배계급과 보수파들을 압박해야 한다. 낙태권 운동이 노동계급의 여성과 남성들이 대거 동참하는 대중운동으로 발전할 때 낙태죄 폐지와 낙태 합법화가 성취될 수 있다.

여성운동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이 말뿐인 것에 불만을 품은 여성들은 5월부터 대중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고 그 규모가 갈수록 커졌다. 올해 5~8월 불법촬영(몰카)에 항의하는 운동은 네 차례 집회에 연인원 17만~18만여 명이 참가했다.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였다. 3차 집회 뒤에는 ‘문재인 재기해’ 구호를 트집 잡아 친문 인사들과 언론들이 마녀사냥을 벌였지만, 8월 4일 광화문 집회에는 더 많은 여성들이 참가했다(주최 측 추산 7만 명). 이 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며칠아 5차 집회 일정이 공지될 듯하다.

10대·20대의 학생과 젊은 노동계급 여성들이 참가자의 대부분을 이룬

이 운동은 기존 주류 여성운동 밖에서 일어났다. 여성들은 불법촬영(몰카)에 대한 미온적 수사와 불충분한 정부 대책에 분노했을 뿐 아니라 성별 임금격차, 승진 차별, 기업과 국가 요직에 여성이 소수인 현실 등 사회의 성차별 전반에 대해 분노를 터뜨렸다. 연성어나 키즘 성향을 보인 집회 주최 측은 성차별에 대한 강한 분노의 일환으로 분리주의를 강하게 드러내며 문재인 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 국가기관 전반을 거침없이 비판했다.

엔지오가 주도하는 주류 여성운동은 ‘불편한 용기’가 이끈 불법촬영 항의 운동보다 훨씬 덜 두드러지긴 했지만 올해 미투와 낙태죄 폐지 운동 등 의미 있는 집회를 조직했다. 미투시민행동이 주최한 안희정 무죄 판결 항의 집회에는 여성들이 대거 참가해 2만 명이 참가했다.

불법촬영 항의 운동, 낙태권 운동, 미투 운동은 그 운동의 참가자 구성, 양상, 주최 측의 성향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모두 여성 천대·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에 대한 여성들의 열망을 담고 있다. 차별에 저항하며 평등을 쟁취하기 위한 여성들의 투쟁은 앞으로 더 확대되고 심화되어야 한다.

올해 차별에 맞선 여성들의 운동이 크게 성장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페미니즘도 시험대에 올랐다. 5월 이후 여성들의 분노가 폭발하자 문재인 정부는 처음에는 몇 가지 대책을 제시하며 달래려 했다. 하지만 여전히 불충분한 대책에 참가자들은 만족하지 않았고 불법촬영 항의 운동은 계속 확대돼 왔다.

이 운동이 적당한 수준에서 멈추길 바라는 문재인은 최근 진선미 민주당 전 원내수석부대표를 여성가족부 장관 자리에 앉혔다. 진선미는 2015년 국회에서 소라넷 폐지를 공론화해서 소라넷 폐지 운동을 벌인 메갈리아의 공식 지지를 받은 바 있다. 그래서 문재인은 진선미가 이 운동을 잘 관리해 주기를 기대한다.

진선미가 문재인이 이런 바람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여전히 매우 불충분하다. 특히, 불법촬영물 유포의 주범 중 하나인 웹하드 등과 같은 기업 규제에 열의가 전혀 없다.

문재인은 페미니스트 각료 등을 내세워 계속 ‘성평등 정부’ 행세를 하려는 한편, 여성운동을 길들여 결국 약화시키려 할 것이다. 따라서 여성운동이 실질적 양보를 얻어 내고 큰 전진을 이루려면 문재인 정부에게서 독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핵심적으로 중요하다. 또한 여성운동은 더 개방적으로 연대를 건설해 운동의 저변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여성 차별 반대 운동은 노동계급의 여성과 남성이 대거 동참하는 더 크고 강력한 운동으로 성장해야 한다.

이 글은 지난 7월 21일 맑시즘2018 워크숍 '문재인 정부와 페미니즘에서 발표한 내용을 그 뒤상황 변화를 반영해 대폭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 워크숍을 주최해 준 장미순 씨에게 감사드린다. 축약되지 않은 전문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여성운동 지도자들과 자본주의 국가의 밀접한 관계

최일봉

여성단체 지도자들은 여성 전체를 대표한다고 자처함으로써, 여성할당제를 통해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비례대표 자리를 확보해 왔고, 자유주의 포퓰리스트 정부에 각료로 입각해 왔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의 상임대표를 지내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비례대표 의원은 떼어놓은 당상이라는 말도 있었다. 한번 여연 출신 권력층 인사들의 면모를 살펴보자.

- **정한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여연 7대 대표.
- **남(남윤)인순 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국회의원(이하 의원), 민주당 최고위원**: 여연 상임대표(2005~2011),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 여성본부장 지냄.
- **권인혁 현 민주당 의원, 민주당 원내부대표**: 여연 상임대표(2011~2013),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2008~2014), 여성민우회 대표(2005~2011).
- **정춘숙 현 민주당 의원**: 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여연 여성인권위원장(2010~2012)
- **이우정 여연 창립자이자 1대 대표**: 1970년대 노동운동·민주화운동 참여한 신학자, 1990년대 전반부에 민주당 의원, 2000년 평화(를 만드는)여성회 이사장.
- **이미경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자 현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이사장**: 1993년 여연 공동대표, 그 전에 여성민우회 부회장을 지냄: 민주당 소속 5선 의원, 대선 후보 문재인 캠프 공동선대본부장.
- **한명숙 37대(2006~2007) 국무총리**: 최고 거물 정치인, 여연 4대 대표, 2선 의원, 초대 여성부 장관, 환경부 장관.
- **지은희 여연 5대 대표**: 2대 여성부 장관(2003~2005)
- **이경숙 여연 6대 대표**: 17대(2004~2008) 의원
- **박선숙 현 바른미래당 의원**: 여연 정책위원(1989~1991), 김대중 대통령 대변인.
- **김삼화 현 바른미래당 의원이자 바른미래당 원내부대표**: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성폭력상담소는 여연 소속 단체), 변호사 출신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도 지냈음.

여성운동은 거의 다 시민단체, 즉 NGOs로 조직돼 있고, 여성 NGOs의 핵심 지도자들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통합돼 있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자본주의적 국가로 포섭돼 있다.

급진 페미니스트들이 메갈리아조차 결성 몇 개월 뒤인 2015년 연말 민주당 진선미 의원을 공식 후원하기로 해, 249명이 후원에 참여했고 후원금액만 1200만 원이 넘었다. 이듬해인 2016년 초에는 총선을 앞두고 진선미 의원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진선미 의원은 페미니스트로, <여성신문> 자문위원이었고, 2004~2006년 민변 여성인권위원장을 지냈고, 조금 전까지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로 지금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이다. 2012년에는 국회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을, 2014~2016년에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대선 기간에 문재인 선대위 유세본부 수석부분부장도 역임했다.



2017년 4월 대통령 후보 초청 성평등 정책 간담회에 참가한 여성단체 지도자들과 문재인

가장 최근에 등장한 페미니스트들과 국가의 밀접한 관계

2016년 총선 결과를 유리한 쪽으로 제대로 이해한 것은 좌파보다는 페미니스트 진영이었다. 사기가 오른 페미니스트들은 강남역 살인사건을 자기네에 유리하게 아전인수해, 페미니즘 지지의 동력으로 활용했다. 그들은 조현병 환자에 의한 ‘묻지마 살인’ 사건을 ‘여성혐오 살인’ 사건으로 둔갑시켰다. “여자라 살해당했다”, “남성은 모두 잠재적 가해자”라는 구호가 분리주의를 드러냈다.

위마드 문제

한편 2016년 1월 위마드가 새로 결성됐다. 사실 이들은 2015년 여름에 탄생한 메갈리아 내에서 분파로 존재해 왔었다. 분파와 중심부 사이의 핵심 쟁점은 남성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 문제였다. 위마드로 발전하는 분파가 남성 성소수자에게 적대적인 입장이었고 더 강경한 분리주의자들이었다. 그러나 위마드가 더 빨리 성장하면서 기존 메갈리아 지지자들을 대부분 흡수했다.

위마드는 기존 여성운동 바깥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여성운동에 관여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그들은 과거의 영페미들과 달리, 대규모 대중 운동이 분출하는 데 일조했다. ‘불편한 용기’와 비웨이브라는 네트워크를 형성해 그렸는데, 특히 ‘불편한 용기’는 얼마 전에 무려 7만 명이 참가한 불법촬영 반대 대중 집회를 열 수 있었다. 한국 여성운동 사상 최대 규모 시위였다.

비웨이브 측은 거침없이 문재인 정부를 신랄하게 비난했다.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 이십만이 우스웠나” “앞

그 시기에 메갈리아가 페미니스트 진영의 선봉에 섰다. 그러자 진중권, 정희진 등 비판적 친민주당계 지식인들과 <한겨레>, <경향신문> 등 친민주당계 언론들이 메갈리아를 공개 옹호했다.

그해 9월 한국여성재단은 대규모 컨퍼런스를 열어, 페미니스트 진영 전체를 결속시키는 행사로 삼았다. 컨퍼런스의 개최사를 한 여성재단 이사장은 이해경 씨로, 여성민우회 이사 출신이

에서는 웅웅 알았어요! 뒤에서는 통수치냐” “탈남 믿지? 지랄 마라 표리부동 작작해라” “야 문재인 못 믿을 새끼, 야 박근혜 여성을 위해서는 하는 것 없지만 낙태 하나는 집요한 새끼”.

이러한 비웨이브 측의 에토스(태도와 정신, 기풍 등)는 ‘운동권 배제’ 등 유사 아나키즘적 경향을 나타내며 국가 및 자유주의적 여성 지도자들이 이끄는 기존 여성운동과 미묘한 긴장을 빚고 있다.

때마침 문재인 정부의 인기는 하락하고 있다. 이 상황은 정부에 친화적인 기성 페미니스트 진영에 난점을 안겨 줄 것이다. 지난 25년 동안에는 이 상황에서 도전하는 반대파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위마드와 그 협력자들이 그런 반대파로 등장하고 있다. 개혁주의적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반대 세력이 그만큼 아나키즘과 비슷한 에토스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이론의 빈곤과 전통의 부재 때문에 정치적으로 모호해서 심지어 박근혜에게 우호적인 경향마저 스며들 여지가 있다.

더구나 아나키즘은 개혁주의와 연계될 때 기회주의적 태도를 취한 역사적 선례가 풍부하다. 가령 ‘불편한 용

고, 2013년 박원순 서울시장으로부터 서울시 여성상 대상을 받았다. 이해경 여성재단 이사장은 현재 미래포럼 이사장이기도 한데, 미래포럼의 창립자는 고 박영숙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었다. 여성재단은 글로벌 금융기업 JP모건과 함께 ‘다문화 여성 경제적 자립 지원’ 사업을 해 왔다. 또한 화장품 대기업 아모레퍼시픽과도 공간문화 개선사업을 공동으로 해 왔다. 컨퍼런스의 폐회사는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이 했는데 그는 내가 앞서 언급한 이미경 민주당 의원과는 동명이인이다. 이미경 성폭력상담소장은 지난해 삼성행복대상을 수상했는데, 삼성행

기’ 측은 기성 언론의 마녀사냥에 직면해 위마드와의 관련성을 공개 부인했다.

역사적으로 위마드류의 페미니스트들을 ‘분리주의자들’이라고 불렀다. ‘분리주의’라는 말뜻은 ‘남자 반대’라는 뜻이다. 옛 소련 블록 붕괴 이후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 서너 차례 등장한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크게 좌파적 페미니스트들과 분리주의적 페미니스트들로 분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두 부류 모두 파편화를 면치 못했고, 그 결과 급진적 페미니스트 개개인은 학계로 가거나, 아니면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소그룹 활동을 이어 가거나, 아니면 조직이 해산함에 따라 페미니즘적 활동을 일절 그만두는 것으로 나아갔다. 자본주의 시스템에 도전하지 않고서는 급진성은커녕 때때로 진보성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적잖은 급진주의자들이 부르주아 페미니즘, 즉 고등교육 받은 중간계급 여성들을 기반으로 친자본주의적 여성 개혁가들이 하는 운동 쪽으로 포섭됐다. 위마드는 대규모 대중운동의 등에 올라탔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하게 분화할 것 같다.

복대상은 삼성이 주최하고 여성가족부가 후원하는 행사이다.

이처럼, 전체적으로 페미니스트 진영은 자본가 계급의 자유주의 정치인들과의 유착은 물론이거니와, 부르주아 국가 및 자본주의 대기업과의 밀접한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이 결여된 듯하다.

맺으며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페미니즘을 지지한다. 페미니즘이 성평등을 추구하는 운동일 반을 가리키는 한에서는 말이다. 하지만 페미니즘이 젠더이분법적 세계관에 기초한 이론과 이데올로기를 뜻한다면, 계급과 계급간 투쟁, 노동계급 투쟁을 중심에 놓는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편에서는 논쟁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혁명가들이 페미니즘에 접근하는 방식을 요약한다면 비판적 지지라고 할 수 있겠다. 그 운동은 지지하고 그 이론과 사상은 비판하는 것 말이다.

물론 여기에는 긴장이 따르고, 구체적 맥락을 고려한 균형이 필요하다. 요즘처럼 광범한 여성이 차별과 천대에 저항하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하고 때로 극적으로 드러내는 시기에는 지지가 압도적인 출발점이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 여성들이 동원된 불법촬영 반대 시위는 말할 것도 없고, 노동계급 쟁점이라고 재규정돼야 하는 낙태죄 폐지 운동, 항소심을 앞둔 안희정 무죄 규탄 시위 등이 그러하다.

영국 대학노조 간부이자 사회주의자 로라 마일스 방한 강연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대학 교육을 망가뜨렸는가

영국 대학노조(UCU) 전국집행위원이자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오랜 활동가, 《트랜스젠더 차별과 해방》(책갈피)의 저자인 로라 마일스(사진)가 7월 19~22일 방한해 노동자연대가 주최한 '맑시즘2018'에서 연설했다. 이 글은 7월 21일에 로라 마일스가 한 강연을 독자들이 읽기 편하게 1부와 2부로 편집한 것이다. 2부는 온라인 기사로 실리는데, 영국 대학 노조 투쟁의 경험과 교훈을 다룬다.

제 강연의 초점은, 주되게는 신자유주의 하에서 고등교육이 어떻게 공격받고 있고, 이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이며, 이를 통해 대안적인 고등교육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영국 대학에서 파업이 벌어지던 당시의 영상을 잠깐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상영] 영상을 보면 느껴지겠지만, 이렇게 영국 대학 파업 때 사람들이 활력이 넘쳤습니다. 그들이 부른 노래는 쿼의 노래를 개사한 것이었는데 “Don't stop me now”가 아니라 “Don't dock our pay”라고 해서 우리의 임금을 깎아먹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고등교육을 쟁취하려면 이것보다 더 많은 투쟁과 파켓 라인과 파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안 좋은 상황에 대해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일어난 일인데요, 영국의 어느 유명 대학에서 교수가 잘리게 생겼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충분한 연구 지원금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합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고등교육 시장화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교육 제도가 자본주의에서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 잠시 짚어 보겠습니다. 19세기에는 무상 초등교육이 크게 확대되는 시기였습니다. 20세기는 무상 중등교육이 크게 확대된 시기였죠. 이 모든 것들은 노동자, 노동조합, 또 사회주의자들이 싸워서 얻어 낸 결과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무상 초등·중등 교육이 확대된 것은 자본가 계급 입장에서 좀 더 교육받은 노동계급을 양성할 필요가 있었던 것의 반영이기도 했습니다.

자본가 계급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교육받았지만 그렇다고 너무 교육받지는 않길 바랍니다. 그들이 보기에 ‘지나치게’ 교육받은 노동계급은 지배계급에게 위협이 된다는 것이 명백했던 것입니다.

에당초 기대대로라면 21세기는 고등교육이 무상으로 제공되고 확대되는 시기여야 했습니다.

우리 사회주의자들은 항상 고등교육이 특권이 아닌 권리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윤을 위한 지식이 아니라 지식 그 자체를 위한



연금 개악에 맞서 벌어진 영국 대학노조 파업 이 파업을 통해 1만 4000명이 신규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맑시즘2018에서 연설하는 로라 마일스

지식 추구가 옳다고 말해 왔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지식 그 자체를 위한 지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자유주의와 긴축의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영국 등지에서 정부들은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직접 부과하지 않고서는 더는 교육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교육을 위한 재원이 있느냐 없느냐는 언제나 정치적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교육에 재정을 대는 대신 그들은 항상 전쟁 비용과 핵무기에, 그리고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주는 데 재원을 쏟아붓습니다. 또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거의 빈사 상태에서 비틀거리는 좀비 은행들과 기업들을 살리는 데 엄청난 재원을 쏟아부었습니다.

또 대학 총장들과 고위 관리자들의

보수는 엄청나게 올려 줬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영국에서는 대학 총장들이 영국 총리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고, 많은 경우 민간 기업 CEO들과 연봉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대학 직원들이 이에 불만을 느끼는 건 당연하죠.

언제나 그렇듯 자본가 계급은 이윤 창출을 위해 교육받고 숙련된 노동자들이 필요하지만 그 노동자들을 교육하는 데 드는 비용은 대려 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공격

그래서 지난 20여 년 사이에 우리는 지배계급이 고등교육 일반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공격을 해 온 걸 봤습니다.

영국에선 이 공격이 칼리지에서 시

작해 이제는 종합 대학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영국 고등교육은 칼리지와 대학으로 나뉘는데, 칼리지는 중등교육의 연장이라고도 할 수 있고 직업 교육 학교로도 볼 수 있다.] 고등교육 기관은 원래 학술 기관이고 직원들이 학술적 자유와 고용 안정을 누리는 기관인데 지배계급은 이를 바꿔 놓으려 합니다. 지식 그 자체를 위한 지식 추구가 가능한 환경을 바꾸고 싶은 것이죠.

또, 대학을 학생들이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교육적인 경험을 하고 양질의 강의와 지원을 받는 공간이 아니라, 고도로 위계적인 관료적 이윤 창출 조직으로 바꿔 놓으려 합니다.

이미 영국의 많은 대학들이 외국 학생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높은 등록금을 받으면서 엄청난 이윤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대학 직원들은 연구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대학 직원들은 갈수록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격투에 시달리고 또 사사건건 업무에 간섭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 지배자들은 입법을 통해 대학들이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으로써 이것을 달성했습니다.

대학 입학 정원이 없어져 강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대형 강의를 하는 교원들은 강의를 준비하고 채점하느라 일주일에 50~70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놀라시겠지만 이제 영국 학생들은 등록금을 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당시에는 등록금이 없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죠. 오늘날 학생들은 1년에 최소 9000파운드[약 1300만원]를 내야 하고, 생활비까지 스스로 마련해야 합니다. 막대한 등록금을 내면서 학업을 유지하기 위해 아르바이트까지 뛰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학자금 대출 금리는 인플레이션의 세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학을 졸업하는 영국 대학생들은 평생 자신을 따라다닐 학자금 빚을 최소 4만 파운드나 지는데[약 5700만 원] 이것은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이후에 모기지 대출을 받거나 다른 용도의 대출을 받기도 어렵게 만듭니다.

2010년 당시 정부가 등록금을 인상했을 때 분노가 폭발한 학생들이 시위를 벌이고 대학을 점거하고 행진을 벌이면서 경찰들과 싸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등록금 인상이 결국 관철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과 교원들의 삶이 이렇게 팍팍해진 것에 덧붙여서, 대학 내의 서비스들이 민영화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지원서비스 중에 도서관이나 청소 서비스까지 외주화되고 있죠. 이는 대학들을 직접 민영화하기 위한 준비 단계임이 명백합니다.

또 영국에서는 드러내 놓고 영리를 추구하는 대학들의 설립이 허용됐습니다. 이런 학교들은 주로 경영학 같은 직업 교육성 과목들을 제공합니다.싼 게 비지떡인 코스들입니다. 주로 인터넷 강의에다가 일부 학습 지원 같은

▶ 7면으로 이어짐



▶ 6면에서 이어짐

것들이 제공되는 수준이죠. 그리고 그 코스를 마친다고 해서 일자리를 얻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의 결과 중 하나로, 영국 명문 대학들은 돈이 아주 넘쳐 납니다. 영국의 어느 대학을 가 보더라도 대규모 공사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학의 외형을 더 화려하게 해 줄 허세성 건설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대학 내 고위 관리들과 총장들은 서로 월급을 높여 주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오늘날 평균적으로 대학 총장은 대학 교수보다 연봉이 열 배나 됩니다.

많은 비정규 직원들은 연 소득 8000파운드 또는 1만 파운드 [약

1150만 원 ~ 1450만 원] 정도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학 직원들 사이에서 병가율이 급격하게 치솟았습니다. 과도한 업무로 무기력증이 와 일을 못 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졌고요. 매년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서 이직률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많은 대학 기관들이 병가에 관한 새로운 규칙을 도입했는데요. 병가 이용 내역을 검토해 직원들을 해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이런 제도 때문에 일자리를 잃게 된 많은 직원들을 노동조합에서 대변한 바 있습니다.

1980년대 대처와 레이건이 추진한 신자유주의 공격의 합의는 모든

것을 상품화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식도 그렇게 상품화할 수 있는 것이 됐고 그래서 지식 경제라는 말이 유행하기도 했죠. 이런 공격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더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자본가들은 이제 드러내 놓고 고등교육을 자본주의의 기업 활동, 자본 축적 활동에 더 깊이 통합시키는 방향으로 가져가자고 말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대학 기관을 직접적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기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고등교육의 시장화·민영화에 맞서 싸우는 싸움은 국제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정리발언

영어 강의에 대해서 누군가 흥미로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어제 한 강사랑 대화를 나눴는데 그 사람도 영어로 강의 요청을 받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어 교육 강의를 아니었고 완전히 다른 주제의 강연인데도 영어로 해 달라고 했던 겁니다.

흔히 영어 사용자들이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영어를 사용할 거라 지레짐작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요. 제가 대화한 그 강사는 그럼에도 영어로 강의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짐작하기로, 지배자들이 이렇게 영어에 꽂히는 것은 국제 학술계와 재계의 공용어가 영어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동지가 어떤 과목은 학생들한테 강요되고 어떤 과목은 거의 인기가 없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영국에서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에서도 대학뿐 아니라 일반 학교들에서도 미술이나 음악, 사회과학 또는 역사와 같은 과목들은 이제 더는 인기가 없습니다. 반면에 수학이나 과학 그리고 영어 과목들은 거의 필수죠.

그리고 교육의 목적은 결국 배우는 것이 아니라 취업이라는 생각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안적 교육은 무엇이나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안드렸는데,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은 원칙에 입각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일단 그것은 무상이어야 하고, 누구에게나 제공되며, 평생 받을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하고, 교육 주체들이 교육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본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복무하는 교육이라는 의미에서 인본주의적 교육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죠. 지금의 추세는 고등교육을 엘리트들에게 국한시키고 노동계급 출신 자녀들에게는 접근을 막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대학과 학교는 우리에게 투쟁의 현장이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교육은 계급 투쟁 자체에서 나옵니다.

채용 성차별에 손 놓고 있는 문재인 정부

하반기 신입 공채가 물려 있는 9월이 시작됐다. 청년 실업률은 10.5퍼센트로 사상 최고치다.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페미니스트 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채용 성차별이 여전히 분노를 낳고 있다.

특히 올해 4월 금융권 채용 비리 조사로 성차별 채용 관행이 다시 한번 폭로됐다. KEB하나은행은 처음부터 내부적으로 남녀 비율을 4:1로 정한 채 선발했고, KB국민은행은 아예 남녀의 합격자 중 남성은 113명이 추가 합격했고, 대신 여성 지원자 중 합격한 112명이 불합격했다.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말이다.

이런 성차별 채용이 비단 금융권에 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올해 3월 구인·구직 사이트 인크루트가 여성 구직자 59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72퍼센트가 “구직 활동에서 여성으로서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우리 사회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의 취업 장벽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93퍼센트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런 조사 결과는 단지 여성 구직자들이 면접 과정에서 받는 ‘느낌’만은 아니다. 지난해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인사담당자 3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발표에 따르면, 응답자 55퍼센트가 ‘채용 시 동일 조건일 때 선호하는 성별 여부’가 있다고 답했다. 그중 ‘남성’을 선호한다고 밝힌 응답자가 67.4퍼센트로 ‘여성’(32.6퍼센트)의 두 배가 넘었다. 238개 기업을 상대로 설문조사에서는 63.4퍼센트(151개)가 채용 시 지원자 성별을 고려한다고 답했다. 그 중 유리한 성별로 ‘남성’을 꼽은

기업은 74.2퍼센트를 차지했다.

성희롱

면접 과정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받는 질문들도 있다. 결혼, 남자친구, 출산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단골이다. 도대체 남자친구 유무나 결혼 여부가 업무와 무슨 연관이 있으며, 출산이 업무 능력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인크루트가 올해 3월 ‘면접 갑질’에 대해 조사한 것을 보면 면접 현장에서 성희롱과 성차별도 여전히 존재한다. “박근혜한테 같은 여자로서 동정표 줄 생각은 없고?” “애 언제 낳을 건가요?” “3년 동안 애 안 낳을 각오 있으면 알려 주세요.” “결혼할 나이가 한참 지난 것 같은데,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에 많은 구직자들이 “불이익을 받을까 봐” 참고 넘겼다고 응답했다.

현실이 이렇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 애초 4월 금융권 성차별 채용 관행이 폭로됐을 때, 당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금융노조 출신이다)은 ‘금융기관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해 조사를 요청해 달라’는 김기식 전 원장의 제안을 “금융기관 혼란”을 이유로 거절한 바 있다. 기업들의 이윤을 보호하고자 여성들의 평등 염원을 무시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여성·노동단체들로 구성된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의 면담 요청도 수차례 거부해 왔다.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은 구직 과정에서 성차별 사례를 제보받아 공개하고 해당 기업에 항의 공문도 보낼 예정이다.

구직 과정에서부터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채용 성차별에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기업주 처벌 강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

이지원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회원



심각한 청년실업 하에서 여성들은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정부는 난민법 개악 중단하고 난민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

9월 16일 “난민과 함께하는 행동의 날” 난민을 지켜줘야 한다

9월 16일 서울 도심에서 “난민과 함께하는 행동의 날” 집회가 열린다.

지난 6월 예멘 난민 500명의 제주도 입국을 계기로 난민 쟁점은 한국 사회의 뜨거운 이슈가 됐다.

우익들은 예멘 난민들을 표적 삼아 이슬람 혐오와 인종차별적 주장을 퍼뜨려 왔다.

지난달 문재인 정부는 이런 우익들의 압력에 굴복해 난민 인정을 더 어렵게 만들고 통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위선적이게도 “난민 보호에 대한 책무”를 운운하면서 말이다. 정부는 즉각 이집트, 소말리아, 파키스탄, 미얀마 등 정치적 박해 때문에 난민이 많은 나라들을 대거 무사증 입국 국가에서 제외했다.

정부 방침은 난민들의 처지를 더 한층 악화시킬 것이다.

2013년 한국이 난민법을 시행한 이래, 전쟁과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온 이들이 대폭 늘었지만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난민 신청자들은 입국 후 6개월 동안은 취업도 할 수 없고, 그 뒤에도 단

순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인종차별적 우익들은 정부가 난민 지원에 대단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양 호도하지만, 정부한테서 생계비 지원을 받은 이들은 극소수다(2017년 기준 3.2퍼센트). 그조차 평균 3개월 동안 20~40만 원(1인 기준)을 받을 뿐이다.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해, 한가닥 희망을 안고 고국을 떠난 많은 난민들이 안전을 보장받기는커녕 위태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

난민법 개악

정부는 9월 말까지 제주 예멘 난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끝내겠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심사는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예상된다. 난민 인정을 더 어렵게 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첫 사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정부의 명대로 제주도를 떠나 제3국으로 가는 난민들이 생기고 있다. 난민 불인정은 이들을 더한층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다.

나아가 정부는 아예 난민법을 개악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도 난민법 개악안을 발의해

둔 상태다. 하반기 국회에서 난민법이 개악될 가능성 있다. 이는 인종차별적 우익들을 더 고무할 것이다.

한편, 이집트 출신 난민 신청자들은 공정하고 신속한 난민 심사 절차 마련과 2년 넘게 지체되고 있는 자신들의 난민 신청에 대한 응답을 요구하며 2주 넘게 청와대 앞 단식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난민 신청자들이 목숨 건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도 정부는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다.

9월 4일에는 19일째 단식 농성 중인 아나스 사하다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후송되고, 6일째 단식 중이던 무나 씨 역시 응급실로 실려 가는 상황마저 발생했다.

다행히도 이들의 투쟁에 한국 시민·사회·좌파 운동 단체들의 연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주 단식 농성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고, 지지방문, 농성장 지키기, 팻말 시위, 의료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다. 노동자 연대도 “Welcome Refugees! Stop Racism!(난민을 환영한다! 인종차별 중단하라!)” 스티커를 부착한 물

100병을 전달하며 연대했다.

전쟁과 정치적 박해, 경제적 고난을 피해 온 난민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의 피해자들인 이들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다.

정부가 난민법 개악 시도를 철회하고, 난민 인정과 지원을 대폭 확대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국방비 지출로 수십조 원을 쓸 게 아니라 그 돈을 난민들의 처지 개선에 쓰라고 요구해야 한다.

지배자들은 난민 등 이주민을 테러나 실업의 원인인 것처럼 호도해 왔다. 그러나 이런 마녀사냥은 제국주

의·자본주의 체제라는 진정한 원인을 가리고, 노동계급 내부를 이간질해 단결을 약화시키려는 것이다. 경제 위기가 심화하며 노동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지금, 이런 이간질과 책임 전가에 반대해 난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게 더욱 중요한 이유다. 또한 민주노총 같은 노동자 대중 조직이 난민 방어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

9월 16일 난민 방어 집회에 적극 참가해 정부와 우익에 맞서 난민의 권리를 옹호하고 난민 지지 목소리가 적지 않음을 보여 주자.

이현주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노동자 연대〉는 마르크스주의로 세계를 분석합니다.

- ▶ 투쟁하는 노동자와 노동자 연대를 건설하는 사람들의 신문
- ▶ 차별과 억압에 맞서 대안을 제시하는 신문
- ▶ 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논쟁적인 신문
- ▶ 국제적 저항과 운동 소식을 좌파적 관점에서 전하는 신문
- ▶ 저항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신문
- ▶ 독자들이 판매자이자 기고자이고 후원자인 신문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wspaper.org**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26개 호) 5만 원, 2년(52개 호) 10만 원

신청 : 02-777-2792, wspaper.org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F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정기구독을 신청합니다

이름	_____
전화번호	_____
이메일	_____
구독기간	☐ 1년 (26개 호) 50,000원 ☐ 2년 (52개 호) 100,000원 ☐ 2년 이상 ()년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보내 주세요. 담당자가 확인한 후에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6491-2792 / ws@wspaper.org	